권두시평

왕신셴(王信賢)

대만 국립정치대 동아연구소 소장

〈권두시평〉에는 정치사회학 분야에서 대만의 대표적 중국연구자인 정치대 동아연구소 왕신셴(王信賢) 소장의 "중국의 공동부유론을 보는 시각" 이란 글을 실었습니다. 공동부유론의 이론과 정책적 함의를 사회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에서 폭넓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동부유론'을 보는 시각

왕신셴(王信賢)
대만 국립정치대
동아연구소 소장

중국공산당에게 2021년은 시진핑의 20차 당 대회 연임을 위해 분위기를 조성한 해이다. 건당 100주년을 대대적으로 축하하고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의 완성"이라는 목표 달성 이외에도, 19차 6중전회에서 제3차 역사 결의인 『당의 100년 분투의 중대한 성취와 역사적 경험에 관한 결의』를 통과시켰다. 그 밖에 2021년 8월 중앙재경위원회 (이하 중앙재경위)에서 시진핑이 공식적으로 '공동부유'를 주창한 해이기도 하다. 이것은 시진핑의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한 것이다. 즉 그의 역사적 지위를 제고하고 정치적 업적을 쌓아 보다 안정적으로 20대 연임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공동부유'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것은 단어 자체의 매력 때문이라기보다 "빈부격차"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사회적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해 중국 각 영역에서 연이어 발생한 큰 사건들은 분배 문제와 큰 상관성이 없어 보인다. 예를 들어, 알리바바와 텅쉰 때리기와 통제, "앤트 파이낸셜(螞蟻金服)"과 "디디추싱(滴滴出行)"에 대한 엄격한 감독 및 관리, 문예계의 "정풍(整風)", 교육업계에 대한 감독과 "쌍감(雙減: 숙제 감소, 교외 보충학습 감소)" 정책, 연 소득 50만 인민폐 가정의 "고소득" 분류, 주중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시간 제한, 심지어 마윈과 같은 몇몇 거물급 민간 기업가의 "행방불명" 등으로 모두들 "산에

"'공동부유'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것은 단어 자체의 매력 때문이라기보다 "빈부격차"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사회적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해 중국 각 영역에서 연이어 발생한 큰 사건들은 분배 문제와 큰 상관성이 없어 보인다."

비가 오려니 바람이 먼저 누각에 가득하다" 라고 느낄만했다. 이러한 추세는 좌파 학자 리광만(李光滿)의 "모두가 느끼고 있듯이, 한 차례 심각한 변혁이 진행 중이다!" 라는 문장이 여러 관방 매체에 의해 전파되면서 절정에 이르렀다.

중앙재경위에서 시진핑이 "공동부유는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다." 라고 연설한 것과 현재 관찰된 정책들을 보면, 공동부유는 20차 당 대회의 주제이자 2035년의 비전목표가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공동부유의 함의를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그리고 정치적 관점에서 공동부유가 제기하는 구조적 요인과 최근 광범위한 관리감독 행위를 촉발하는 요인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공동부유 사상과 정책적 함의

사회주의 정권으로서 중국공산당의 역대 지도자들은 정책목표로 모두 '공동부유' 를 언급했다. 1953년 12월 마오쩌둥은 "농업생산합작사에 관한 결의" 에서 최초로 '공동부유' 를 언급했다. 주로 "3대 개조" 이후 농촌에서 부농경제제도와 개체경제제도가 사라지자, 농민들이 공동부유에 이르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1956년 중국공산당 8차 당 대회의 의중이 국가 업무의 중심을 경제건설로 전환하고 "생산력" 을 발전시킨다는 것이었지만, 일련의 정치 운동으로 업무의 중심이 "생산관계" 로 전환되었다. 결국 "균부(均富)" 를 실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균빈(均貧)" 이 되고 말았다.

덩샤오핑도 마찬가지로 '공동부유' 를 주장했다. 그는 "사회주의의 본질은 생산력을 해방시키고, 생산력을 발전시키며, 착취를 소멸시키고, 양극화를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공동부유에 도달하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생산력" 을 제일 우선으로 하는 것이었지만, 중국의 상황은 "인구는 많지만 토대는 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었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공동부유에 도달해야 했다. 그러므로 덩샤오핑은 일부 사람, 일부 지역이 먼저 부유해지고, 먼저 부유해진 자들(先富)이 나중에 부유해질 자들(後富)을 이끌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선부론" 또는 "단계적 전이론" 은 결과적으로 시장 메커니즘과 국가정책으로 인해 전이될 수 없었고, 빈부격차, 도농격차를 심화시켰을 뿐이었다.

시진핑은 정권을 잡은 이후 "두 개의 100년" 목표를 주장했고, 첫 번째 100년의 목표를 중국공산당 건당 100년(2021년)에 "전면적 소강사회의 건설" 로 삼았다. 그 구체적 정책은 "탈빈곤" 이었고 이 목표는 이미 달성되었다. 두 번째 100년의 목표는 중국공산당의 정권 수립 100년(2049년)으로,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적이고 조화로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여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2035년을 두 개의 100년 사이에 "교점"으로 삼았고, 목표는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시진핑은 여러 차례의 연설에서 "공동부유"가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의 중요한 지표라고 말했다. "100주년 당경축일" 연설에서도 "발전의 불균형 · 불충분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 전체인민의 공동부유가 보다 실질적으로 진전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19차 6중전회에서 통과된 『당의 100년 분투의 중대한 성취와 역사적 경험에 관한 중공의 결의』에서도 2035년부터 21세기 중엽까지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의 기본적 실현"을 언급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공동부유'는 시진핑 체제의 핵심정책이고 중국공산당 국가 거버넌스의 주요 목표이다.

'공동부유'의 함의에서 가장 주요한 것은 2021년 8월 중앙재경위 제10차 회의에서 시진핑이 언급한 바와 같이 "공동부유는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점이다. 또한 2021년 10월 『구시(求是)』에 실린 시진핑의 "공동부유의 착실한 추진"이라는 연설문(이 문장은 중앙재경위 연설의 일부임)에서 공동부유 정책의 함의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동부유의 유래

시진핑은 "당의 18대 이래 당 중앙은 발전 단계의 새로운 변화를 파악하고, 점진적으로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의 실현을 보다 중요한 위치에 올려놓았다. 지역의 협력발전을 추동하고, 민생 보장과 개선을 위한 유력한 조치들을 채택하며, 탈빈곤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면적 소강사회를 건설하여 공동부유를 촉진하기 위한 좋은 환경을 조성했다. 이제 공동부유를 착실히 추진할 수 있는 역사적 단계에 도달했다."라고 말했다. 바꿔 말하자면, 발전 단계에 있어서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의 완성" 이후 공동부유의 추진을 현 단계의 목표로 삼겠다는 것이다.

2) 공동부유의 6가지 목표

(1) 발전의 형평성, 협조성, 포용성의 제고, (2) 중위소득층 규모의 확대, 중간은 넓고 양끝이 작은 올리브형 분배구조의 형성, (3) 기본적 공공서비스의 균등화 추진, (4) 고소득에 대한 규제와 조절, (5) 인민의 정신 생활에서의 공동부유 촉진, (6) 농민과 농촌의 공동부유 촉진.

3) 공동부유의 실현 방법

(1) 사회계층의 고착화 방지, 상층으로의 원활한 이동 통로 확보, "내권(內卷)" 및 "탕핑(躺平)" 문제의 해소, (2) 케이크를 잘 나누어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합리적 분배구조의 형성, (3) 저장(浙江) 공동부유 시범구의 건설, 각 지역의 지역에 맞는 효과적 경로 탐색 권장, (4) 1차 분배, 2차 분배, 3차 분배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기초 제도의 구성.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올해 들어 각 영역에 걸쳐 이루어진 대대적인 관리감독은 '공동부유' 의 일환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중국 각 대기업들(특히 민영기업)도 줄을 이어 기부 계획을 발표하거나 공동부유 계획을 내놓았다. 예를 들면 텅쉰은 500억 위안을 "공동부유 전담 계획" 에 기부한다고 발표했고, 알리바바는 "공동부유를 위한 10대 행동" 에 1,000억 위안(한화 약 18조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핀둬둬(拼多多) 또한 농업발전에 100억 위안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밖에도, 핑안보험(平安保險), 메이투안(美團), 중국은행 등 수백 개의 기업이 모두 '공동부유' 에 호응했고, 그 결과 "마지못해 하는 기부" 라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중앙재경위 판공실 부주임 한원슈(韓文秀)는 "부자를 죽여 빈자를 살리지는 않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일련의 관리감독 행위들이 어떻게 나타나게 된 것인지를 사회경제 및 정치의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 "시진핑은 여러 차례의 연설에서 공동부유가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의 중요한 지표라고 말했다. 공동부유는 시진핑 체제의 핵심정책이고 중국공산당 국가 거버넌스의 주요 목표이다."

사회경제적 측면

1) 과도한 빈부격차

개혁개방 이후의 정책에 의해 중국에 "3대 격차

현상(三差現象)" 이 출현했다. 즉 지역격차, 도농격차 그리고 빈부격차가 계속해서 커졌다.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공포한 전국 주민 평균 가처분소득에 대한 "지니계수" 에 의하면, 2008년에 최고점인 0.491을 찍은 이후 조금 낮아져, 2020년에 0.468이 되었지만, 많은 국제기구는 이 수치가 이미 0.5를 넘었다고 추정한다. 최근 중국인민은행의 화폐정책위원회 위원이며, 시진핑의 중요한 경제 참모인 차이팡(蔡昉)이 제기한 "공동부유" 의 기준은 지니계수를 0.4 이하로 낮추는 것인데, 이것은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한 임무이다.

주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1993년 중국 지니계수가 이미 0.4를 넘는 경계 수치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소득격차를 1990년대 초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둘째, 중국 지니계수 수치가 과도하게 올라간 이유는 구조적이고 총체적인 성격을 갖는다. 예컨대, 지역격차와 도농격차를 줄이는 것이 쉽지 않다. 국가통계국의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중국 도농 주민 간 평균 가처분소득 차이는 2010년 2.99에서 2.56으로 떨어졌지만, 도시의 사회복지 등을 감안한다면, 그 차이는 훨씬 커질 것이다. 그 밖에 2020년 성(省) 간의 최대 소득격차도 3.55(상하이와 깐수)이다. 동부와 서부, 중부와 서부, 동북과 서부 지역의 소득격차는 각각 1.62, 1.07, 1.11이었는데, 이 또한 지니계수를 높이는 주요 요인이다.

> "개혁개방 이후의 정책에 의해 중국에 "3대 격차 현상(三差現象)" 이 출현했다. 즉 지역격차, 도농격차 그리고 빈부격차가 계속해서 커졌다."

2) 탕핑(躺平)과 내권(內卷)

빈부격차의 확대와 관련해서 격차의 "구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초부터 2010년 초까지 10년 동안, 경제의 급속한 발전으로 소득

격차가 확대되었지만, 각 사회계층에 속한 민중의 임금도 함께 올랐다. 그러나 최근 중국 인터넷을 가득 채운 "상승 통로가 이미 막혀버렸다.", "996(9시 출근, 9시 퇴근, 주6일 근무), 자살, 과로사", "중국은 값싼 농민을 보내고, 값싼 대학생을 맞이하고 있다." 등의 글들은 일반 민중의 비관적 삶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내권"과 "탕핑"이라는 두 가지 어휘로 집약되었다. "내권"은 아무리 노력하고 힘들게 일해도 생활의 질을 개선할 수 없고, 제자리에서 맴돌 뿐이라는 의미이다. 이처럼 무력한 상황에서 오로지 "탕핑", 즉 드러누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탕핑이야말로 정의"라는 글이 널리 퍼져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코로나 발발과 경제발전의 정체는 사회 밑바닥 민중에게는 설상가상이 되었다. 중앙재경위에서의 시진핑의 연설에도 "내권"과 "탕핑"이 들어가 있는데, 인터넷과 사회의 유행어가 이미 당 중앙 최고지도자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을 알 수 있다.

3) 경제성장 완화를 위한 준비

중국 경제는 2021년 초 국내에서 코로나 상황의 안정과 내수 소비의 증가 등으로 1분기 GDP 성장률이 18.3%(2020년 1분기에는 비교적 낮은 수치였음)에 이르렀으나, 2분기, 3분기 경제성장은 그에 미치지 못하여, 각각 7.9%와 4.9%의 성장률을 보였다. 하반기에는 전기 공급 제한, 홍수, 일부 지역의 코로나 발생 등의 원인으로, 공업생산, 소비시장, 투자의 증가 또한 완화되어 리커창 총리가 11월에도 여러 차례 중국 경제가 새로운 하행 압력에 직면했음을 밝히기도 했다. 중공 관방의 경제 고문단이 2022년 중국의 경제성장 목표를 5%-5.5%로 잡아야 한다고 건의했는데, 이 숫자는 2021년 양회에서 국무원이 설정한 6%보다 낮은 수치였다. 베이징 칭화대 중국 경제사상 및 실천 연구원의 리다오쿠이(李稻葵) 원장에 의하면, 코로나라는 "검은 백조"이외에도, 채무 쇠퇴(특히 끊임없이 치솟는 지방채무), 산업사슬의 재배치(지역화), 저탄소 등 세 마리 "회색 코뿔소"가 있어, 중국의 미래 경제발전은 보수적으로 전망해야 한다.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공동부유라는 전략적 목표와 실천적 노선의 실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파악해야 하며, 합리적 제도를 통해 "케이크"를 잘 배분해야한다고 밝혔지만, "중대 리스크 예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파악을 해야 한다"고도 했고, "6대 안정(六穩, 취업 안정, 금융 안정, 해외무역 안정, 외자 안정, 투자 안정, 경기 안정)"과 함께 "6대 보장(六保, 주민 취업, 기본 민생, 시장 주체, 식량 에너지 안전, 산업사슬 · 공급사슬의 안정, 기층 조직의 운영)"을 실현해야 한다

고 했다. 그 밖에, 최근 중국 각 성이 연이어 "감봉 폭풍"을 일으키고 있고, 저장(浙江)에서는 심지어 공무원의 연봉을 절반 이상까지 줄이기도 했다. 이것은 "공동부유"의 본뜻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공동부유'는 재정 분배에 대한 국가의 개입의 강화로써 향후 도래할 경제 하락에 대비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독점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올해 중국 경제에서 가장 주목을 끈 것은 "반독점" 강화이다. 중국 시장감독총국은 2월 7일 『국무원 반독점위원회의 경제 영역의 반독점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인터넷 플랫폼 감독을 강화하고, 이어서 알리바바에게 182.28억 위안의 중징계를 내렸다. 전인대 상임위원회는 10월 다시 『반독점법(수정초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에 혁신 장려와 반독점처벌 상한선 확대가 포함되었으며, 기업의 알고리즘과 데이터 남용 등의 행위도 규제하고자 하였다. 그 밖에 중국은 국내 빅데이터 기업의 미국 상장에 대해서도 감독의 강도를 강화하였다. 예를 들면 디디추싱과 앤트파이낸셜의 상장계획을 중지시켰는데, 한편으로는 "데이터 보안"에 대한 정치적 고려라고 여겨지나, 다른 한편으로 "국진민퇴(國進民退)"의 연장선이라고 여겨진다.

앞에서 서술한 사회경제적 요인들로 인해, 적지 않은 학자들은 중국이 이번 "공동부유" 주장과 실행을 통해 경제발전 모델을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공산당이 집권 이후 추구한 것은 소련식 중공업 모델이었는데, 산업 배치의 불균형과 당내 정치적 갈등을 초래했다. 후에 독립적 자주경제 노선으로 전환하였지만, 또 대약진과 인민공사 등의 재난을 초래하였고, 개혁개방 이후에는 미국식 자본주의 노선을 채택했다. 그리하여 빈부격차의 확대와 자본에 대한 관리감독의 부재 등의 문제를 낳았다. 그러나 시진핑이 주창한 '공동부유'는 실질경제를 강화하는 한편, 성장으로부터 분배로 나아가, 사회복지정책으로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고, 더불어 국가안보를 강조함으로써 미중 간의 장기적 전략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정치적 측면의 해석을 필요로 한다.

정치적 측면

경제와 사회 등과 같은 구조적 요인들과 비교하면, 정치적 측면에서의 해석은 비

교적 "행위" 차원의 요인이다. 예를 들어 지도자의 권력 또는 정책 결정의 시점 등으로, 다음에서는 시진핑 정치권력의 공고화, 간부의 승진 경쟁과 민심 포섭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1) 시진핑 정치권력의 공고화

시진핑 집권 이후, 반부패, 군사 개혁, 일련의 기구 설립 및 개혁, 법률 및 당내 조례의 제정과 수정을 통한 "의법치국" 등을 단행했다.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시장과 사회에 대한 국가의 권력 회복, 정부에 대한 당의 권력 회복, 최종적으로 당으로의 권력 집중, 그리고 나아가 당의 권력의 상부로, 나아가 총서기로의 집중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시진핑 개인으로의 집중이다. 당의 세 가지 역사적 결의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듯이, 당내 권력이 최고 권위자를 기준으로 할 뿐만 아니라, 당의 역사적 지위 또한 마오쩌둥, 덩샤오핑에 비견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초월한다. 그러나 시진핑에게 있어서는 정치적 업적을 통해 그 권력의 공고화를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공동부유' 의 제기는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시진핑의 첫 번째 임기의 "정치적 업적" 은 반부패와 제도 수립이고, 두 번째 임기에는 경제발전과 사회적 공평이 될 예정이었으나, 미중 무역전과 코로나가 "경제발전" 단계를 어지럽혀서, 초점을 "사회적 공평" 으로 전환하여 정권의 공고화와 시진핑 연임의 승부수를 높이고자 한 것이다.

둘째, 7월 1일 "당의 100주년 축하" 에서 시진핑은 공식적으로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의 완성을 선포하여, "20대" 연임을 뒷받침하는 중대한 정치적 업적으로 삼았다. 그러나 "거국체제" 하에서 "탈빈곤 공략" 을 위해 이미 각종 자원을 동원

> "시진핑이 주창한 '공동부유' 는 실질경제를 강화하는 한편, 성장으로부터 분배로 나아가, 사회복지정책으로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고, 더불어 국가안보를 강조함으로써 미중 간의 장기적 전략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정치적 측면의 해석을 필요로 한다."

하였고, 그에 이은 임무는 "빈곤으로의 회귀 방지" 였다. 일단 회귀하게 되면, 그 영향은 사회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 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동부유' 가 가장 중요한 정책적 초점이 된 것이다.

2) 정치적 승진 경쟁

올해 이뤄진 일련의 관리감독은 '공동부유' 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공동부유' 가 중앙재경위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된 이후 감독 행위의 빈도, 강도, 범위 모두 강화되었고, 거의 모든 사회 영역과 계층에 영향을 미쳤다. 문제는 바로 왜 지금 사방을 공격하는가이다. 바로 20대에서의 승진 경쟁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이다. 개혁개방, 특히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 이후 이뤄진 급속한 경제발전은 부분적으로 정부 간 경쟁에 힘입은 바이다. 그것은 즉 지방 간부의 공적과 "승진 경쟁" 으로 인한 것이다. 그것이 일종의 행정 거버넌스 모델로 자리 잡았다. 경쟁의 우승자는 승진을 하게 된다. 경쟁의 기준은 상급 정부가 정하는데, GDP 성장률일 수도 있고, 다른 지표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시진핑 시기 당 중앙은 정치, 경제, 사상 등 각 영역을 전면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했고, 시진핑의 "20대" 연임이 완전히 확정된 상황에서 당 중앙과 시진핑에 대한 정치적 충성과 정책적 협력은 모든 간부들의 기본적 자세이다. 그러므로 "20대" 각 부문, 각 계통은 최고지도자의 '공동부유' 주장을 이룩하기 위해, 홍보, 인터넷, 교육, 문화, 발전개발위원회, 국가안보, 은행보험 감독, 증권 감독 등을 포함하여, 혼신을 다하고 있다. 이것이 곧 단기간 내에 각종 영역에서

"사회주의 정권으로서, 자본집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의 재분배를 진행하며 사회복지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정권 합법성의 기초이다. 또한 민심을 포섭할 수 있는 중요한 작업이다."

의 감독 정책이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이유이다.

3) 관리감독 행위로 민심 잡기

사회주의 정권으로서, 자본집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의 재분배를 진행하며 사회복지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정권 합법성의 기초이다. 또한 민심을 포섭할 수 있는 중요한 작업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민중은 빈부격차, 부동산 투기, "탕핑", 그리고 노동 권익(996과 같은 문제) 등에 대해 유감을 갖고 있다. 알리바바, 텅쉰 등 부유한 민영기업이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해주었지만, 그들의 자본 확장이 또한 "탕핑"과 "내권"을 초래했다는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반감을 갖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국가의 '공동부유' 주장이 주거, 의료, 임금, 그리고 하층민의 생활 문제 등을 해결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중앙이 나선다면 민중에 공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이번 관리감독 행위에서 이름을 날린 것에는 "반독점", "실질경제의 강화", "반부패", "사회적 풍조의 정돈", "학생의 부담 감소"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각 부문의 관리감독 행위가 한꺼번에 사회 각 층면에서 이루어졌지만, 지나치게 "일반적 규범을 벗어난" 행위를 한다면, 중앙이 언제든지 나서서 중재하고 판결하는 역할을 하여 정의라는 미명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시진핑이 "고소득에 대한 합리적 조절"을 주장하자마자, 인민일보사가 『중국경제주간』에 연소득 50만 위안을 고소득 가정으로 지적하여 다수 중산층 가정의 우려를 낳게 되었는데, 중앙이 곧 그 기준을 부인한 것처럼 말이다. 그 밖에, 민영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국진민퇴"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해 류허(劉鶴) 등이 나서서 국가는 민영기업을 지지한다고 밝힌 것도 그렇다.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공동부유'는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이후 시진핑의 가장 중요한 내정 목표이다. 2022년 "20대 정치보고"의 중요한 구성일 뿐만 아니라, 2035년 비전과 목표의 주요 방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사방에 대해 공세적인 관리감독 행위는 "승진 경쟁"의 일환이므로, "20대" 인사가 정해지고, "20대" 이전 안정을 우선시함에 따라, 관리감독 행위의 빈도와 강도가 대폭 줄어들 것이고, 그것을 사회복지정책의 추진이 대체할 것이다.

글을 마치며

'공동부유' 에는 사회경제적 측면의 빈부격차의 축소와 공평한 분배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시진핑 권력의 공고화, 간부의 승진 경쟁과 사회 안정 등의 의제가 포함되어 있다. 심지어 빈번하게 대두되는 관리감독 행위는 모두 시진핑의 "총체적 국가안보관" 하에서 "발전과 안전을 총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금융 안전, 사이버 보안, 나아가 정치 안보 등이 모두 "공동부유" 관리감독정책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음 몇 가지 논의할 문제가 있다.

1) 문혁의 재현인가?

관리감독 행위가 집중적으로 출현하고 있으므로, 적지 않은 평론가들이 마오쩌둥의 "좌"파 노선이 다시 출현한 것이 아닌가 우려한다. 예를 들면 문예계에 대한 관리감독은 마오 시기의 "문예정풍" 과 "해서파관(海瑞罷官)" 을 생각나게 하고, 심지어 장래 "문화대혁명" 의 효시가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그러나 "반독점" 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대형 민영기업과 기업 전반에 대한 규제 또한 건국 초기 "공사합영(公私合營)" 운동을 상기시키고, 리광만은 "모두가 느끼고 있듯이, 한 차례 심각한 변혁이 진행 중이다!" 라는 문장에서 "중국이 지금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고, 경제 영역, 금융 영역, 문화 영역 그리고 정치 영역까지 모두 심각한 변혁을 겪고 있으므로, 한 바탕의 심각한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라던가, "이것은 자본집단으로부터 인민 군중으로의 회귀이다. 이것은 자본 중심으로부터 인민 중심으로의 변혁이라고 할 수 있다. 인민 중심으로의 변혁을 저해하는 것은 모두 폐기될 것이다." 라는 류의 평을 하고 있다. 이 문장이 발표된 이후 각 관영매체들이 같은 글을 그대로 옮겨 실어 2차 문혁 또는 문혁의 재현인가 하는 우려를 낳았다. 그러나 지금은 중공의 정권 수립 초기와는 환경이 다르고, 시진핑의 권력과 마오쩌둥이 투쟁을 하던 상황과도 다르므로, 문혁이나 계급투쟁의 전주곡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3차 분배'란 무엇일까?

공동부유와 관련이 있는 것이 공평 분배이다. 시진핑은 "1차 분배, 2차 분배, 3차 분배가 조화를 이루는 기초적 제도를 구성"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특히 공동부유는 "3차 분배" 에 해당된다. 그러나 보통 1차 분배는 "시장 분배" 이고, 2차 분배는 "정부 분배(재정)" 이며, 3차 분배는 비정부조직(NGO)나 사회기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현재 중공이 말하는 "3차 분배"와 학리적 "3차 분배"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적어도 두 가지 의제가 드러난다. 첫째는 중국 정부가 최근 한편으로 억압의 방식으로 공민 사회, 민간 부문의 발전을 통제해왔다는 점이고, 다른 한편으로 "공공서비스 구매"를 통해 사회조직을 흡수하고, 그로 인해 진정으로 제3부문의 기능이 발휘되기 어려워졌으며, "3차 분배"의 중책을 맡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둘째는 현재까지 알리바바, 텅쉰, 핀두어두어 등이 "공동부유"를 추진하기 위한 기부를 하였는데, 기부 대상이 정부였고, "당이 모든 것을 관할한다"는 전제 하에 국가 재정으로 귀속되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2차 분배이지 "3차 분배"가 아니다.

"'공동부유'에는 사회경제적 측면의 빈부격차의 축소와 공평한 분배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시진핑 권력의 공고화, 간부의 승진 경쟁과 사회 안정 등의 의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다음 몇 가지 논의할 문제가 있다."

3) 정책 집행의 난이도와 후과

최근 시진핑의 "제도화 집권"과 "제3의 역사 결의"로 시진핑의 지위가 급부상했다. 공동부유 등 정책 목표를 지나치게 높게 잡고 스스로를 신격화한 후 정치적 업적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공동부유의 목표를 "지니계수" 0.4로 설정한다면,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임무에 가깝다. 인민의 기대가 지나치게 높아져서 실망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지난 9년 동안, 시진핑의 실책은 국무원이 끌어안았다. "20대" 이후 국무원 총리가 "총 집사"로 나선다면, 그 정책과 의지가 완전히 수행될 수 있지만, 과거의 "방화벽" 기능은 상실될 수도 있다.

종합하자면, '공동부유'는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노력해야하는 방향이다. 중국의 '공동부유'는 분배의 공평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이지만, 한편으로 그 개념이 지나치게 방대하

고, 그로 인해 초래된 관리감독 행위가 그것을 목표로 삼아 정치 경쟁을 하도록 하여 본래의 분배 정의라는 본뜻을 흐리게 만들었다. 다른 한편, 국가가 민영 기업과 공민 사회의 자주성을 약화시켜 당과 국가가 여전히 중대한 책임을 짊어진 주체가 되었고, 중국공산당과 중국 인민의 운명이 하나로 묶이고 말았다. 이것이 현재 중국공산당이 추구하는 이상이자, 중국의 정치적 현실이다.

권두시평

왕신셴(王信賢)
대만 국립정치대 동아연구소 소장

국립정치대 동아연구소 소장(현)
국립정치대 동아연구소 특별초빙교수(현)
국립타이베이대 공공행정정책학과 겸임교수(현)
국립정치대 국제관계연구중심 부주임
국립정치대 국제사무학원 부원장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도쿄대, 와세다대 방문학자
국립정치대 박사